

대정부질문 이틀째, 계속되는 오염수 공방

“文정부 ‘삼불일한’이 주권침해” vs “해군, 방사능 직격탄”

〈興〉

〈野〉

한 총리 “안보, 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안전 방류 위한 협력·감시 더 중요”

김병주 “해군 식수, 조수기로 정수
방사능 그대로… 측정장비도 부족”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주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삼불일한(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을 내세운 것을 ‘주권 침탈’ 행위라고 폄하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 27일 자오저젠 중국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 대변인이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것은 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삼불 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중국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작년 8월에

도 한중 양측 간,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이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주권하고는 아

무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삼불일한(삼불정책과 배치한 사드 운영 제한)으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처리수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고 말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애꿎은 해병 장병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누군지 아시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당연히 100만 수산인들”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이다. 해군은 바다의 물을 먹는 것 알고 계시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 물은 정수가 다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조사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에 잔물을 제거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된다면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우리 해역에서 방류와 관련해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일본 해역 바깥 공해에서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하시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5200만 명이 누가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해군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10월에 도입되는 5대 말고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집행을 요청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총선 전초전’ 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검·경 대결구도 되나

興 공천 여부 고심… 김태우 후보 유력
野 경찰청 출신 진교훈 후보 전략공천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알아볼 수 있는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만큼 공천 여부를 고심하며 뒤늦게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앞서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3파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당초 김기현 지도부는 자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내세워 무공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의 대법원



오는 10월에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며 올린 사진. /김 전 구청장 페이스북

유죄 판결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지만, 혐의의 내용이 공익제보에 관한 것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은 만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강서구에서 정치신인이었던 김 전 구청장이 승리를 가져왔던 경쟁력도 김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청장의 재공천 기류에 힘을 보탤다. 김 전 구청장도 사면을 받은 후 바로 재출마 의지를 보인 것을 용산 대통령실의 뜻으로 읽는 시각이 많았다.

결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

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내일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공관위가 꾸려짐에 따라 이후 절차에 따라 후보 공모와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전략공천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가 진 후보에게 후보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선거 승리의 총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 진 후보를 비롯해 정춘생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문홍선 서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로 압축해 심사했지만, 당은 진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서는 멈춰 세워야 한

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이 공천할 가능성에 대해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 구정 공백과 40억의 구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뛸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뷰 의뢰로 지난 28~29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9.9%, 진 후보는 30.1%의 지지를 얻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자 확대

대상 기간 접종후 최대 90일까지
사망지원금 3000만원으로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에 대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

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

향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사망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국민통합위 “고립 인구’ 약 280만명 추정”

사회적 고립자 일상 복귀 위해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고립·은둔 인구 규모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고립’이란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국민통합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고

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익 기자